

대한민국의 성취를 토대로 해야만 통일도 실현 가능해진다

~大選을 위한 한나라당의 國政方向~
대 선 정 책 방 향

안 병 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뉴 라이트재단 이사장

이 글은 금년 연말의 대선에서 한 나라당이 추구해야 할 국정的基本방향을 제시해 본 것이다. 오늘날 한국정치의 기본쟁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견지하느냐,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고 보고 통일 후에 나라의 정통성을 재정립해야 하느냐에 있다.

대한민국
**한나라당은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정통성

한나라당은 전자의 입장에 서고, 「범여권(편집자 前열우당 및 그 동조세력)」은 후자의 입장에 선다. 近現代史的(근현대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성취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산업화와 민주화뿐

이다.

그러므로 통일도 대한민국의 성취를 토대로 해야만 실현 가능하다. 그 미래가 불투명한 남북한의 국가연합이나 연방은 한반도전체를 정치적 혼란으로 빠트릴 蓋然性(개연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正統性(정통성)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한국의 현대사적 과제 한국의 현대사적 과제는 先進化(선진화)와 統一(통일)이다. 어느 당이나 양자를 국정의 기본과제로 한다지만, 한나라당은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범여권은 통일에 중점을 둔다. 그런데, 선진화는 근대화의 연속적 과정이므로 그 實行(실행)을 위한 여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통일은 상대가 있고 또 실현될 여건도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追求(추구)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결과 한국정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선진화는 실종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선진화를 국정의 최우선적 과제로 복원시키고, 이를 통하여 정치적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작년의 5.31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高空行進(고공행진)을 하는 이 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국정과제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진 것이다.

선진화 한국현대사는, 건국의 시대(1948~60), 산업화의 시대(1962~86) 및 민주화의 시대(1987~)를 끝내고, 바야흐로 선진화의 시대를 맞으려 하고 있다. 건국의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原則(원칙)을 確立(확립)하고, 산업화의 시대에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민주화

의 시대에는 민주주의를 달성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계는, 螺旋形的(나선형적) 누적과정으로서 앞의 단계가 다음 단계의 前提條件(전제조건)으로 된 것이며, 동일선상의 單純回歸(단순회귀)과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선진화시대의 과제는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앞의 세 단계에서 이룩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간 경제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精神的·文化的(정신적·문화적) 발전은 상대적으로 遲滯(지체)되어 왔다.

그러므로 선진화단계의 기본과제는 「기회의 개방, 관용, 경제적 및 사회적 유동성,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선진적 가치기준으로써 정신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여야간에 엄청난 차이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여야당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선 민주주의의 이해에 관해서 보면, 한나라당은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를, 범여권은 參與民主主義(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代議民主主義(대의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서 많은 한계를 가진다.

시장경제체제의 수정·변혁 요구하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그러므로 참여민주주의가, 結社體(결사체)민주주의나 審議(심의)민주주의와 더불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되면 별 문제가 없으나, 民衆民主主義(민중민주주의)나 人民民主主義(인민민주주의)처럼 대의민주주의를 代替(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범여권은, 복잡한 정파의 잡탕적 결합이기 때문에 그 사상경향을 一義的(일의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으나, 참여민주주의를 후자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여야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 대립점이다.

다음으로 시장경제의 이해에 관

해서 보면, 한나라당은 그것을 자유시장경제로 이해하는데 대하여, 범여권은 복지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社會統合的(사회 통합적) 시장경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범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평등을 毀損(훼손)하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민주적으로 調律(조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율의 수단으로는 중요 산업의 국유화, 평등분배 및 경제통제 등이다.

현 정권의 공기업 불하 정책의 방지, 재분배 정책과 규제 투성이의 부동산정책 등이 이따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사회 통합적 시장경제는, 일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市場經濟體制(시장경제체제)의 修正(수정) 내지는 變革(변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야간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 대립점이다.

통일 통일문제는 현재 한국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사항인데, 범여권의 햇볕정책과 한나라당의 相互主義(상호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왔다. 만약 여권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改革開放(개혁개방)을 끌어내었다면, 비록 그것이 바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하나의 劃期(획기)가 되었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실패. 유연한 상호주의로 북한 인권개선 개혁 개방 유도 등에 관심을

그러나 햇볕정책은, 북한의 객관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主觀的 希望(주관적 희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끌어내지 못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도움을 준 것이다. 그리고 햇볕정책은, 당근정책뿐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될 수도 없다.

이러한 햇볕정책은 상호주의를 가지고서는 북한을 對話(대화)의 場(장)으로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부터 나온 것이나, 이러한 판단은 현재 북한이 놓여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다. 북한은, 그들이 놓인 困窮(곤궁)한 상황으로 볼 때, 상호주의를 취하더라도 반드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상호주의를 취함으로써 북한 주민인권의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 및 핵개발의 포기를 이끌어낼 유효한 정책수단을 확보야 한다.

단, 상호주의는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柔軟(유연)할 필요가 있다. 너무 엄격한 상호주의는 북한주민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南北政府(남북정부) 간의 교섭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호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주의는, 경제적으로 1:1의 관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거나 북한정부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필요하다. (2)飢餓(기아)를 구제하기 위한 북한주민에의 직접적인 원조에 있어서는 분배의 투명성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3)지방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외관계 한국의 역대대외관계는 기본적으로 國際協力路線(국제협력선)이었던데 대하여, 북한은 시종일관 自主路線(자주노선)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하여 종래에 북한은 자주 국가이고 한국은 對美(대미)종속 국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외교노선의 理念(이념)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고, 남북의 정치경제적 自主(자주)·自立(자립)의 實態(실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의 결과는 아니었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저개발국으로서 근대화과정이 캐치·업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근대화성공의 관건이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원칙은 폐기되어야

북한은 시종일관 자주노선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근대화에 실패한 데 대하여, 한국은 국제협력노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근대화에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자주·자립이 굳건히 확보된 데 대하여, 북한은 경제적으로 밖으로부터의 원조가 없이는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은 한국의 국제협력노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자주노선에 말려들고 말았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관계는 자주노선이라는 일관성이 관철되는데 대하여, 한국의 대외관계는 자주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混在(혼재)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한미동맹 속에서 자주국방을 주장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韓美外交關係混亂(대미외교관계혼란)의 본질이다. 한국이 대외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주노선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하여 국제협력노선을 건도록 유도하는 주요한 계기를 마

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맺음말 한나라당은, 금년 연말의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견지하는 한편 국정외 기본방향을 선진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상호주의적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에 두고, 범여권의 통일, 참여민주주의,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햇볕정책 및 對美自主宣言(대미자주선언)과 맞서야 한다.

현재 한국정치는 큰 혼란 속에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범여권이 추구하는 국정외 기본방향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국정외 방향을 흔들어버렸기 때문

이다. 한나라당은 정통보수당으로서 종래의 올바른 국정외 방향인 선진화를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나라당은 종래의 올바른 국정외 방향인 선진화를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대선에서도 성공하고 국정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이 글은 지난 8월 22일에 한나라당의 「당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개최한 심포지움「2007년, 한나라당의 과제는 무엇인가?」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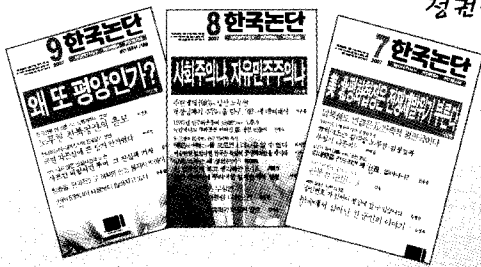
權力이 두려워하는 「한국논단」

“매월 「한국논단」 읽는 맛에 산다”(386세대)

“「한국논단」을 읽으면 3년 묵은 체중이 풀린다”(48대 주부)

“노무현정부·여당에 대드는 유일한 언론대체”(K대 교수)

정권의 비정상을 비판하는 한국 유일의 언론대체(언론신)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 (02)576-4393
FAX (02)576-4501
www.kforum.co.kr